

우리 모두, 바둥거립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에 대한 평가

왜 박노현 교육감 놔두고 서울에서는 주민발의를 하려고 했나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지 1년, 아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지는 5년 반만의 ‘성과’였다. 하지만 특별히 축하를 든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사실 청소년활동가들 사이에는 약간의 당혹감도 감돌았다. 이렇게 쉽게 통과될 조례가 아닌데, 하는 당혹감.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갑갑했던 순간순간들이 떠올랐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과였지만, 일종의 ‘무력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학생참여기획단에서, 공청회장에서, 거리에서, 그 개고생을 하고 주먹구구식 교육청 행정과 형식주의에 휘둘리기도 하고, 집회의 자유와 두발자유 등을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했던 과정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노력은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것만 같은 느낌을, 많은 청소년활동가들이 느껴야만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 등을 흐려놓은 안으로 발의를 했을 때도 그랬고,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도의회에서 삽시간에 통과가 됐을 때도 그랬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골치 아픈 일들은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교 안에,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그래서 통과 직후에는 “두발자유조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고, 오해도 많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배포하고 교육,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었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홍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교육청의 입장과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알지 못하는 현실도 답답했다. 그밖에도 교육청과 다른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의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공조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아쉬웠다.

결국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하고자 한 것은 이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험한 감정과 현실적 어려움들 때문이었다. 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다른 움직임이 필요했다. 두발 완전자유화 등이 명확하게 들어간 좀 더 나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다. 조중동문 등을 비롯한 언론들의 학생인권 반대 공세에 대한 고려도 없진 않았다.

대충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주민발의는 무엇보다도 운동에 대한 강제였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게을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거리에서, 조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학생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를 부여했다. 경향신문 3

월 특집 <아직도 먼 학생인권> 같은 것들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때문에 어떻게든 학생 인권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고 함께 준비한 기획이었다. 또한 주민발의로 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식의 태도 정도를 가지고 있던 여러 단체들, 개인들에게 ‘학생인권 쪽박 차는 꼴 보기 싫으면 서명 모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6개월 안에 8만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조건을 걸으로써, 각계각층의 지역 운동, 시민운동, 종교운동, 노동운동 등이 학생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한 몫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셈이다.

절반의 성공

그래서 그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목표는 달성했을까? 일단 거리로 나가서, 여러 행사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일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아마 본격적으로 거리서명을 시작한 2월부터 5월까지, 못해도 수십만명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다.

주민발의 과정에서, 어디 서명해줄 곳 없나 하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찾고 연락한 끝에, 이전에는 학생인권운동에 대해 잘 모르고 결합하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단체들, 사람들도 발굴해낼 수 있었다. 종교의 자유 조항을 보고 종교계 등이 힘을 실어주었고, 어린이책시민연대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열의를 보였다. 온라인에서도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학생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인권을 위해 글을 올려주고 서명을 모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온갖 노력의 결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무엇보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주민발의 과정에서도 제정 이후에도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할 교육운동의 움직임이 소극적이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처음에 회의 과정에서 주민발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최대 3만, 최소한 2만 정도를 목표로 세웠으나 서울지부 조합원 숫자만큼의 서명도 모으지 못했다. 또한 서울의 여러 지역에 터를 둔 수많은 ‘풀뿌리’ 교육단체들과 교육시민단체들 중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손으로 꼽을 수 있었다.(물론 그 단체의 활동가들이나 간부들은 대체로 서명을 했다. 그러나 단체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진 않았다.)

안이함과 절박함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이 글은 어쩌면 교육운동을 좀 까는 글일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좀 착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반성부터 해보겠다. 나 역시 2010년까지만 해도 이 주민발의에 대해 다소 안이했다. 뭐랄까, 그래도 교육운동을 비롯해서 이른바 ‘민주·진보·개혁’ 운동 안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와 관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이다. ‘학생인권 문제가 공론화된 지가 10여년이고, 학생인권법이나 학생인권조례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게 6년째인데 설마 또 이걸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할까. 여러 단체들의 회원들과 회원들의 지인들 정도만 받아도 받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러나 되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민주노총이나 정당들, 전교조들, 학부모들, 지역단체들 등등을 방문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 학생인권 의제는 설령 그 조직의 간부들이나 활동가들이 동의하고 있더라도 그 조직의 회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의제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수천 수만의 서명을 약속했던 큰 조직의 활동가들은 금세 벽에 부딪혔다. 그게 친환경급식조례나 광장조례와는 다른 부분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려고 한다면, 자기 조직을 그 조직에서만 알아서 챙기는 게 아니라, 학생인권 운동 차원에서 회원들, 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육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하는 등의 자리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었다.

내가 주민발의에 ‘올인’하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데는 만19세 이상만 서명을 할 수 있는 주민발의의 방식도 문제도 있었다. 사실 주민발의 서명을 모으는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리서명 외에는 거의 없다. 심지어 법적으로는 수임인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리서명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직접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초기에 청소년 층의 계획은 홍보 활동을 함께하거나 ‘서울학생인권조례 청소년 서포터즈’ 같은 식으로 학생들, 청소년들을 조직화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나는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들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역에서 학교 안에서 터를 잡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만19세 이상 유권자들 1%의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 주민발의는 그런 데까지 힘을 쏟을 여유를 주지 못했다. 주민발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발의에서 청소년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있어왔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서명은 비청소년 단체들이 모으고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의 행동과 조직을 만드는 사업에 전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비청소년 단체들이 서명을 기대만큼 모으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우리는 그런 방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과연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를 만드는 모든 경우에 감수해야 할 문제일까? 아니면 2010년 11, 12월을 거의 허송세월 하다시피 한 우리의 실수 문제일까? 초중고등학생들이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할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만19세 이상인 비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주민발의 방식과 궁합이 다소 안 맞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안이한 마음가짐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11년 1월 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명 수가 1만도 채 되지 않았고, 2010년 9월에만 해도 빨리 시작하자고 재촉하던 전교조 서울지부에서는 조합원들 사이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주민발의를 계속할 건지 포기할 건지를 안건으로 놓고 논의하는 자리까지 열렸다. 그 자리에 참가한 청소년활동가들이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그냥 주민발의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다른 청소년활동가가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실패해도 연대 사업 하나가 실패한 것뿐이겠지만 청소년인권운동에게는 5년 10년을 해온 운동이 실패하고 크게 후퇴하는 겁니다.” 다시 결의를 다져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끌고 가기로 결정하고, 2월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 같이 거리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목표는 하루 200명씩. 11시30분~5시30분까지 6시간씩. 거리서명의 주력은 어쨌건 청소년활동가들이었다. 그때 청소년활동가들이 그렇게 매일 거리서명을 한 동력은, 마음속에 “역시 어른들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불

신과, 겨우 꽃 피우려고 하는 학생인권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 지경이 되어서도 그 ‘절박함’은 몇몇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 같았다. 나는 무상급식 책 출판기념회에 서명을 받으러 갔을 때 남의 행사에 와서 이런 거 하면 욕먹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활동가의 말은 지금도 내게 상처로 남아 있다. 흥미롭게도, 그 활동가는 1월 말에 주민발의를 끝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1월 말 회의 때 적극적으로 주민발의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단체들 중에서 자기 말에 그만큼의 책임을 진 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홍사단교육운동본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날, 어이가 없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펄펄 울었다. 그밖에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안 한다는 사람들, 주민발의 실패한다고 망하는 거 아닌데 이거에만 목매달 필요 없지 않냐는 사람들, 딱 1번 거리서명 나온 건데 다른 할 일도 있었는데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도 문자를 보내고 하셔서 나왔다고 웃으면서 말하던 사람들, 뭐 어차피 안 되어도 교육감 발의나 의원 발의도 있지 않냐던 사람들 등등... 2월부터 끝날 때까지 3개월은 그런 수모와 실망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힘이 되어준 단체들, 사람들도 많긴 많았다. 정말 서명이 많이 나올 거라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단체였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수백장 수천장을 해오신 곳들도 있었고 마음을 함께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지탱해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3개월을 계속 걸어나간 힘에는, 잘 안 하면서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초만 치는 사람들이 미워서 보란듯이 성공시켜버리기 위해서 한다는 악과 짱, 그리고 그래도 의외의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서라도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이다.

운동의 무능함

교육운동은 왜 그렇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에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물론 학생인권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경향도 많을 것이다. 그에 더해, 처음에는 이 인간들이 학생인권에 반대하거나 떨떠름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냐 하고 화가 났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4월 26일도 넘기고 5월이 되니까 화가 나는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라. 회의에서 분회장들 연락처도 다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분회까지 연락이 다 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전교조 서울지부는 얼마나 현장 조직과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비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뒤에는 얼마나 큰 무력감과 패배의 상처가 있는가. 지역 풀뿌리 교육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교조 지회 없이는 자체적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은 또 어떤가.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수입인 등록하시고 자기 인맥으로 단 하루 동안 6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내는 ‘일반인’에 비해서, 40명 50명도 모으기 어렵다, 학생인권에 대해 말을 꺼내기 두렵다고 하는 교육운동 활동가들은 얼마나 무기력한가. 홍세화 씨가 한겨레 칼럼에 쓴 말마따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은 80만명을 모아내는 상황에서 단 8만명도 모으지 못하는 그 조직력의 차이는 얼마나 참담한가. 체벌금지에 찬성한다는 전교조에서는 왜 체벌금지를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 실천이나 지침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가.(혁신학교에 바빠서?)

우리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하면서 부딪친 것은 사람들의 반발이 아니라 운동의 무능이었고 활동가들의 무기력이었다. 내가 화가 났던 것은, 다수의 교육활동가들에게서 청소년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 어차피 우리 운동의 현실은 시궁창 밑바닥이고 더 물리설 곳도 없고 아등바등 발버둥쳐서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 - 를 별로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교육운동의 현장 조직(학교와 지역)이 모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고, 활동가들의 피로감 때문이었으며, 일종의 현실 안주 때문이었다.

밑바닥에서 바둥거리지 않으면...

4월 중순 무렵에 범국민교육연대 메일을 보다가, 2012년 교육혁명 연구회를 만들자는 제안서를 보고서 열 받아서 답장을 보냈다.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뭐? 2012년 교육혁명을 연구한다구요? --

서울시민 1%의 서명도 조직 못해내는 교육운동이 어지간히 혁명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소식이라고 보낸 이메일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서명 조직해달라는 요청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주간교육동향브리핑에서도 아~주 드문드문 본 것 같네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도 학생인권조례에 올인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학생인권, 청소년인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더이상 호소하고 부탁하기도 지칩니다.

이제는 협박 컨셉이거든요?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실패하면

교육운동을 아주 가루가 되게 밟아 드릴 테니 각오하고 계세요.”

메일을 받아본 담당자 분이나 범국민교육연대 활동가 분들의 얼굴이 어땠을지 알 길이야 없다.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은 마지막 보정기간을 앞두고 있다. 1만장 정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무효 서명지로 돌아온 것 중에 단순 오타나 이름을 잘못 본 것 등등이 많아서 꽤 많은 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거리서명/우편서명도 하루 1000명 이상을 받아내고 있어서, 아마도 성공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단 주민발의가 성공해서 교육운동을 가루가 되게 밟지 않아도 되어서 참 다행이긴 하다. 그밖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민발의 실패할 경우에 대해 온갖 협박을 해놔서 실패할 경우 뒷감당이 걱정이었는데, 다행이다.

하지만 저 이메일에 적은 것과 같은 문제의식은 여전하다. 사실 이 문제는 옛날부터 내가 활동하는 청소년단체 안에서도 계속 말이 나왔던 문제였다. 교육운동은 일제고사를 놓고서 “평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시험식 평가, 점수 평가 자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기는 하지만, 정작 그런 주장을 대중화하고 운동과 실천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무관심하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대학평준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더니 정작 만들어놓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2년 3년 지나니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

는다. 연대체 제안은 맨날 메일로 오는데 그 연대체에서 어떤 현장 투쟁과 실천을 조직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교육희망네트워크가 선거용 조직이라고 비판하는 좌파 교육활동가들은 그림 선거만 바라보고 정책 만들고 토론회하고 세미나 하는 것 외에 무슨 아래에서부터의 운동을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을 보며 교육운동 활동가들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부끄러움? 감동? 글썄. 일단 내 작은 소망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과정이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 자기 운동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안 될 거라고 했던 운동을 성공시킨 그 감격이 교육운동 활동가들에게도 계속 좀 더 적극적으로 밑바닥에서 바둥거릴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4만이 채 넘지 못했던 서명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 속에서 1주일애 1만씩 늘어나면서 결국 8만5천을 넘겼을 때 그 감동을, 이 과정을 함께하고 지켜봤던 활동가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능하면 4월 초나 3월 말 정도에 그렇게 이슈화시키고 소문을 내면서 했다면 피가 마르는 기분을 좀 덜 느꼈을 텐데!) 입으로 헛 약속만 남발하는 몇몇 단체들과 알음알음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담아서 서명지를 수십장 수백장씩 보내주시는 얼굴도 모르는 시민 여러분들을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비교해보면서 느꼈던 그 씁쓸함과 따뜻함이 나만의 것이 아니면 좋겠다.

전교조를 비롯해서 10년 20년 교육운동을 해온 분들이 충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찌면 그건 이제 갓 6년 정도 운동을 한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내 친척 중에도 전교조 해직 교사로서 도피 생활을 해왔던 분도 계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히 지금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다. 교육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과 같이 밑바닥에서 바둥거리려보자고. 바둥거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변화도 빛도 없기 때문이다.